

#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전주 양현고에 국회도서관  
도서 500권 기증 주선

평화당 정동영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 시갑, 민주평화당·사진)은 1일, 국회의원과 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토론회’ 열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능력·자질에 대한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출발점 삼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에 대한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에 단체장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도 그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광역의회 의장 시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정할 바 있는 김 의

원은 “지난 2014년 전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할 당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효력 무효를 관시해 인사청문회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있어 여야를 떠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출

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제화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능력과 자질, 도덕성의 검증 없이 개인적인 친소 여부에 따라 임명하고, 명확한 검증 없이 임명된 기관장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 및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성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500권을 전주 양현고등학교에 기증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정동영 대표는 “영국의 사인 존 밀턴은 ‘한 권의 좋은 책은 위대한 정신의 귀중한 활력소’라고 강조했다”며 “전주시 양현고등학교 학생들이 국회도서관에서 기증한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학업에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6년부터 수집 자료 중 등록제외자료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추천하는 지역의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도서 500권을 기증하는 도서기증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양현고등학교 도서기증은 정동영 대표가 국회도서관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위 본격 가동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각 당 간사를 선출하며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논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앞서 사법개혁위는 한국당이 지난달 18일 사법개혁위 위원명단을 확정하면서 출범했다. 사법개혁위는 오는 8일 법원과 법무부로부터, 9일에는 경찰청과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1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후 20일과 21일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뉴시스

## 문 대통령이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한 것은 기존 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으로 풀이된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만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 전체를 관통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확장은 불가피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원을 편성한 배경이 됐다는 인식이 연설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

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강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룬 경제성장의 수혜를 국민 대다수가 함께 누리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돌파한 성과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지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양극화가 누적·심화되는 동안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 없는 포용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은 지난해부터 줄곧 강조한 최상위 정책적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포용적 성장을 우리 정부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모두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거듭 강조한 것은 야당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후퇴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사람 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역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며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들은 노력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성장통으로 보고 어느 정도 고통 분담도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70조5000억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식의 토대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포용적 성장과 포용 국가를 실현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